

일본의 대아시아 전략과 한중일 3국 관계*

- 일본의 대한·대중인식 및 대아시아정책을 중심으로 -

최은미(국립외교원 연구교수)

논문요약

한중일 3국 협력은 협력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할만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한일, 한중, 일중간 양자간 역사·영토 등 과거사 문제는 3국 정상외 정례화된 회의를 중단시키는 등 협력의 진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친밀감과 신뢰도가 낮은 불편한 관계의 3국이 '협력의 틀'을 만들어 공존하려는 이유에 대해 3국 협력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일본의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대외전략을 기반으로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3국 협력을 증진 및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국의 대외정책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에서 상대국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3국간에 내재해 있는 한일·중일의 역사갈등 문제는 3국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중일 3국 관계는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지닌 채, '3국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최소한의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삼자동거의 긴장관계(a tense ménage à trois)'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한중일, 3국관계, 3국협력, 일본외교정책, 삼자동거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3069083).

I. 서론

2016년 외교부에서 발간한 「2016 한·일·중 협력개황」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의 인구는 15.49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21%(World Bank, 2015년 기준), GDP는 16조 3,676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약 22.3%(World Bank, 2015년 기준), 교역액은 7조 938억 달러로 전 세계 교역액의 약 18.5%(한국 무역협회, 2015년 기준)에 달한다. 이처럼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3국간 협력은 중요하다. 또한, 북한 핵문제 등 불안정한 동북아의 지역 정세를 고려할 때, 외교안보적 측면에서의 3국 협력과 안정된 관계 형성은 한중일 3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의 한중일 3국 협력은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할만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전히 한중일 3국의 협력은 지난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고, 한일, 한중, 일중의 양자간 역사·영토 등 과거사 문제는 3국 정상회의 정례화된 회의를 중단시키는 등 협력의 진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9년 ASEAN+3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시작된 3국 정상간의 조찬회동 이후로¹⁾ 3국 협력의 역사는 약 20년이 경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한중일 3국 협력의 성과와 노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한일, 한중, 중일의 양국관계에 가려져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중일 3국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 창출이라는 원대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력은 이상적이고, 요원하게 여겨졌다.

1) 한일중 3국은 1999년 11월 ASEAN+3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간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2001년까지는 조찬을 겸비한 비공식 회의형태로, 2002년부터는 공식회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ASEAN 회의와는 별도로 3국간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

한중일 3국 관계에 대한 논의는 한일, 한중, 일중의 양국관계를 다루는 국제정치학자, 혹은 국내정치를 중심으로 다루는 지역연구자들에게도 흥미롭거나, 혹은 다루기 쉬운 주제는 아니다. 더욱이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국내외적 역학관계와 정치과정 등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연구자가 많지 않은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 관계 그리고 3국 협력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인접국가들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냉전기 이데올로기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를 넘어 새로운 측면에서 협력의 필요를 증대시키고,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들은 더욱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한중일 3국 관계와 협력에 대한 논의를 고취시키고, 그동안 당위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온 한중일 3국이 협력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국 가운데 협력의 동기가 가장 낮은 일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켜보고자 한다.

한중일 3국 협력의 틀을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관점에서, 경제적인 이점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 주는 이점을 지닌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미중간의 대립 속에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일본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미국을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일본에게 있어 한국은 과거사문제로 점철된 불편한 관계이자, 중국은 경제·안보적인 측면에서 위협적인 존재이다. 더욱이 이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인식 또한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3국 협력을 시작하는데 합의했고, 지속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편한 상대와 협력하는 이유’를 일본의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이론적 접근을 통해 한중일 3국 관계의 특성을 규정해 보고, 둘째, 일본의 대(對)한국, 대(對)중국 및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셋째, 일본

의 대(對)아시아관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에 대한 정책 이해를 도모하여, 넷째, 한중일 3국의 협력관계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한중일 3국 관계 규정을 위한 이론적 접근

국제정치에서 삼각관계의 이론적 접근은 정치학자 디트머(Lowell Dittmer)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디트머는 국제관계에서 갖는 전략적 삼각관계의 형태를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²⁾ 첫 번째 유형은, 세 행위자가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갖지만,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속성을 갖는 ‘삼자동거(ménage à trois)’의 형태이고, 두 번째 유형은, 한 행위자(pivot)가 다른 두 행위자(wing)와 각각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다른 두 행위자는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낭만적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형태이며, 세 번째 유형은, 두 행위자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이지만, 다른 한 행위자는 두 행위자와 모두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안정적 결혼관계(stable marriage)’형태이다.

디트머는 3가지 유형 중, 모든 행위자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면, ‘삼자동거(ménage à trois)’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3자 모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행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협력관계가 최대의 안정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국제관계에서 양자간의 불안정성이 내재해 있고, 양자간의 교섭 목표와 의도가 같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다른 두 행위자간의 목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세 행위자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이익은 적지만, 가장 견고한 형태는 ‘안정적 결혼관계(stable marriage)’이다. 우호적인 두 동맹 파트너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나머지 한 행위자로 하여금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롭고 우호적인 균형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각 행위자의 입장에서,

2) Dittmer, Lowell,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 4, 1981, pp. 485~515.

자신이 중추적(pivot)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낭만적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는 다른 두 행위자로부터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캐플로우(Theodore Caplow)는 힘의 분배에 따라 달라지는 6가지의 삼각관계 유형을 제시하였다.³⁾ 첫 번째는 A, B, C가 모두 동등한 힘을 가진 경우, 두 번째는 A가 B, C보다 힘이 강하지만, 압도적이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B와 C의 힘이 동등하고, A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 네 번째는 A의 힘이 B와 C의 힘을 합친 것보다 훨씬 강한 경우, 다섯 번째는 B와 C의 힘이 다르지만, 합치면 A보다 강한 경우, 여섯 번째는 A, B, C의 힘이 모두 다르지만, A의 힘이 B와 C의 힘의 합보다 강한 경우이다.⁴⁾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의 문제는 각 행위자가 현실에서 처한 국내외적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고, 그들이 갖는 힘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유형분류와 이론화 과정은 각 관계에 대한 이론적 설명 및 각 유형별 특성, 전략에 따른 변형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삼각관계의 이론적 접근을 통해 보았을 때, 한중일 3국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 한중일 3국은 냉전기 이데올로기적 차이에 따라 반공 자유주의 진영에 속했던 한국과 일본, 그리고 공산주의 진영에 속했던 중국으로 나누어 “한국·일본 대(對) 중국”, 일본을 둘러싼 역사인식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중국 대(對) 일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의 북한 문제를 둘러싼 안보이익의 공유에 따라 “한국·일본 대(對) 중국”의 관계를 형성하는 등 쟁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⁵⁾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관계는 디트머의 3국 관계에 대한 이론

3) Caplow, Theodore, “A Theory of Coalitions in the Tria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1, No. 4, 1956, pp. 489~493.

4) 신옥희,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p. 10.

5) 기미야 타다시, “중국을 둘러싼 한일관계: 한국, 한반도에서 본 일본의 대중 인식, 정책.” 『日本研究論叢』 Vol. 47, 2018, pp. 152~153.

적 접근을 차용하여, ①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지닌 3국이 ② ‘3국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③ ‘최소한의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삼자동거의 긴장관계(a tense ménage à trois⁶⁾)’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한중일 3국 관계는 역사·영토 문제 등의 고질적인 갈등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불안정하다.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봉합된 과거사 문제들은 한일, 중일 등 양국관계에서 고착화되었고, 사안의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 양국관계, 나아가 3국관계의 진전을 지연시킨다. 실제로 2012년 중일간 센카쿠열도 영토 분쟁이 심화되며 3국 간 정상회담이 중단된 바 있다. 둘째, 한중일 3국은 다양한 불안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3국 협력’이라는 틀을 구축하였다. 이는 협력 증진을 통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며, 이 틀을 기반으로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그러나 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의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까지 요원하다. 3국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기대하는 효과에 대한 다양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앞서 ‘삼자동거(ménage à trois)’의 특징으로 언급된 바와 같이, 두 행위자의 목표와 의도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다른 행위자의 목표가 동일한지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3국간의 협력의 목표는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로 정해지며, 3국은 ‘최소한의 우호관계’를 형성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한중일 3국은 불안정한 긴장요인을 내재한 채, ‘3국 협력’의 틀 안에서 최소한의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긍정과 부정의 양 특성을 모두 갖춘 “삼자 동거의 긴장관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6) Sakai and Wacker 는 그들의 연구보고서에서 한중일 3국의 관계에 대해 ‘a tense ménage à trois’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Sakaki, Alexandra and Gudrun Wacker, “China-Japan-South Korea: A Tense Ménage à Trois.” SWP Research Paper, 2017.

Ⅲ. 일본의 대중(對中)·대한(對韓) 인식과 한중일 3국 관계

일본이 전쟁에 대한 기억에서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는 것과 달리, 한국과 중국에게 일본은 가해자로 인식된다. 특히, 한일관계에서 36년간의 식민통치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는 한국인에게 국가적 상처이자,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감정은 우호적이지 않다. 이와 같은 반감은 중국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아 한중일 3국 가운데 인식과 감정의 측면에서 일본은 가장 비우호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일본에게도 한국과 중국이 반가운 상대는 아니다. 과거사문제에서 가해자인 일본은 열위에 처하기 마련이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쏟아지는 자국에 대한 비난은 역으로 주변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일본 내각부에서 1978년 이래 매년 시행해 온 ‘외교에 대한 조사’와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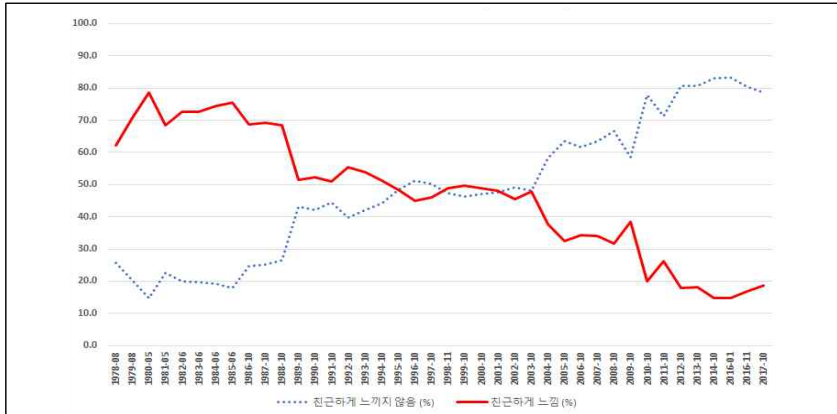
1. 일본의 대중(對中)·대한(對韓) 인식

과거사문제로 인한 한중일 3국의 상호간 불편한 관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아래 <그림1>과 <그림2>는 1978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친밀감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 추이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3>부터 <그림5>는 내각부의 ‘외교에 관한 조사’ 중, 가장 최근인 2017년도 자료⁷⁾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1995년 전까지는 ‘친밀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응답자 수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 수보다 큰 차이로 상회하였으나, 1989년경부터 그 차이가 감소, 1995년에 들어서 역전, 2003년 이후부터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응답자의 78.5%가 중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7) 해당 조사는 2017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본 전국 18세 이상의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중 회수율 60.1%, 유효회수 1,803명이다.

〈그림1〉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친밀감 (1978-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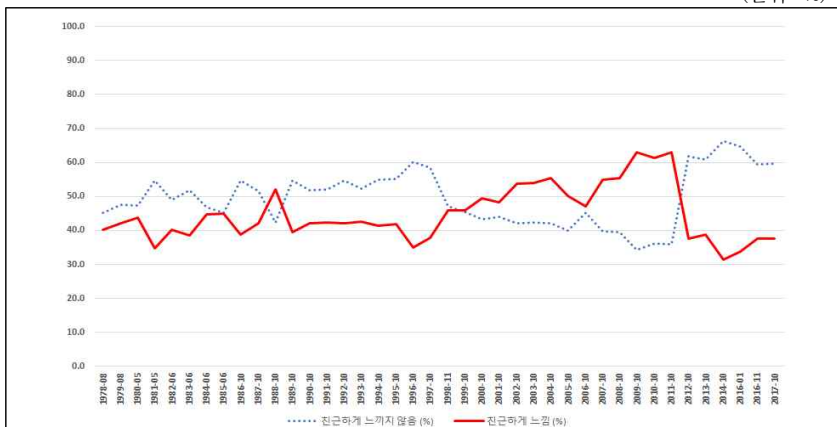


출처: 내각부 “외교에 관한 조사” (1978-2017) 재구성

한편, 〈그림2〉와 같이, 한국에 대해서는 1990년대 말부터 2012년 이전을 제외하고는 ‘친밀하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친밀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응답자의 59.7%가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림2〉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 (1978-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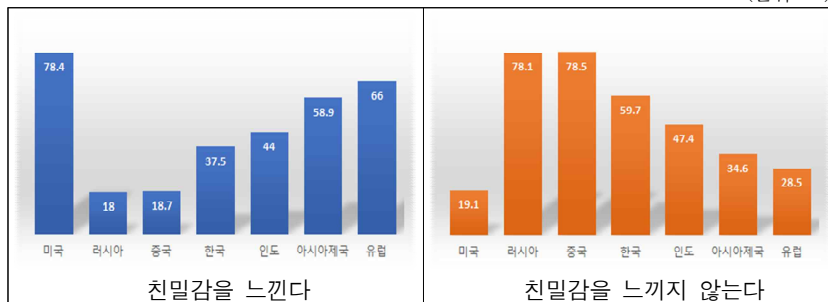
출처: 내각부 “외교에 관한 조사” (1978-2017) 재구성

이처럼 일본의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 정도는 중국에 대해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친밀감 느끼는 국가에서 그렇지 않는 국가로 급변, 한국에 대해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2년 초반을 제외하고, 꾸준히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 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양상은 동일 조사에서 수행된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볼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아래 <그림3>은 일본의 상대국에 대한 친밀감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상대국에 대한 친밀감 정도는 미국, 유럽, 아시아제국, 인도, 한국, 중국, 러시아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각각 37.5%, 18.7%등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3> 일본의 상대국에 대한 친밀감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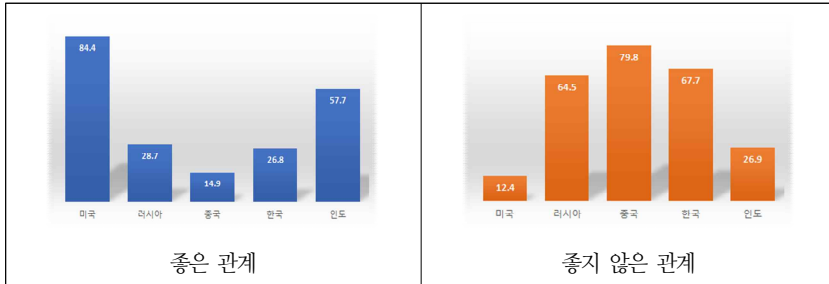


출처: 내각부 “2017 외교에 관한 조사” 재구성

또한, <그림4>와 같이, 상대국과의 관계에 대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국가는 미국,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26.8%, 중국에 대해서는 14.9%로 친밀감 조사와 마찬가지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4〉 일본의 상대국과의 관계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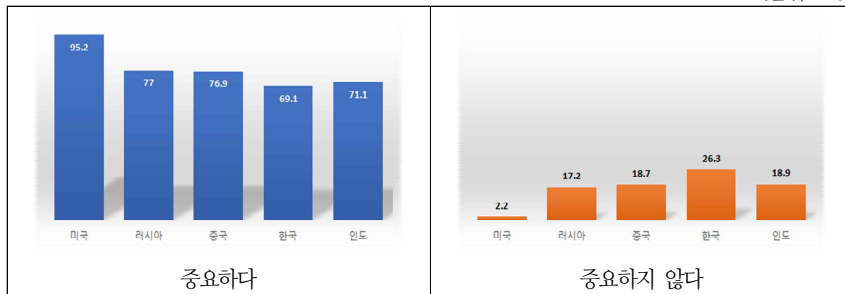


출처: 내각부 “2017 외교에 관한 조사” 재구성

한편, 〈그림5〉와 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기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지리적 인접성이 높은 한국, 중국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26.3%, 18.7%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5〉 아시아태평양 지역발전을 위한 일본의 상대국과의 관계중요성 인식 정도

(단위: %)



출처: 내각부 “2017 외교에 관한 조사” 재구성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본은 한국과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비해, 친밀감과 현재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높은 친밀감과 중요성, 현재 관계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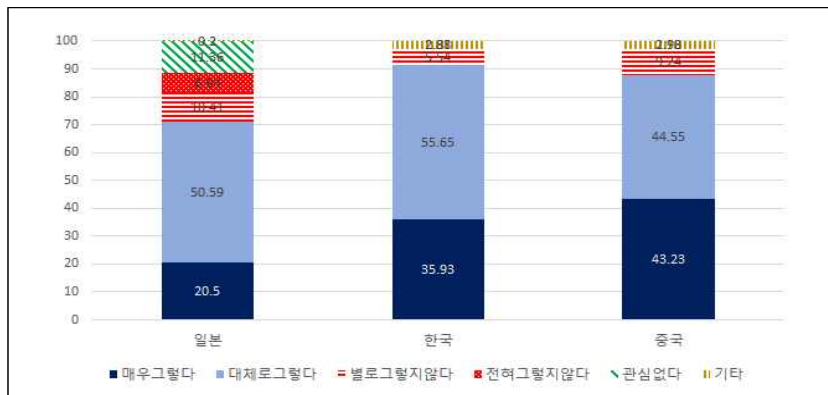
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본의 외교안보 노선이 미일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2.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한 일본의 인식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한중일 3국 국민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한 조사⁸⁾를 통해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아래 <그림6>에서 <그림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은 3국 협력에 대해 확연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중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6>의 한중일 3국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및 <그림7> 한중일 3국 협력 현황에 대해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6> 한중일 3국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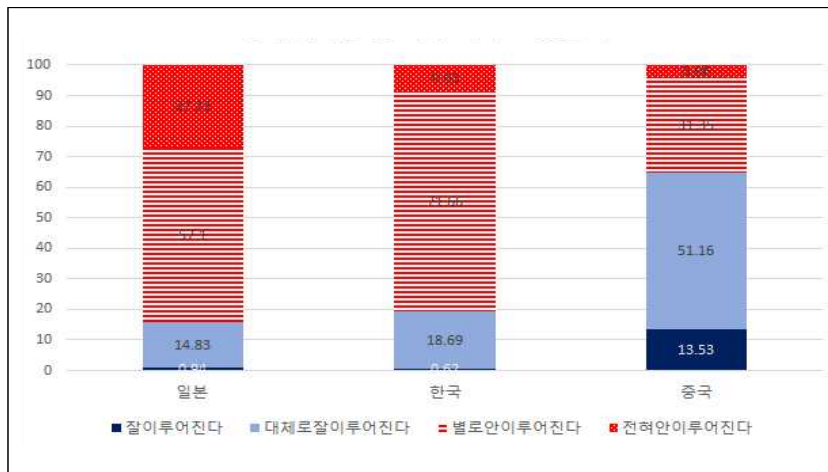
(단위: %)



8) 본 조사는 2018년 5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중일 각 300명(총 900명)의 20대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엠브레인 의뢰)와 215명에게 실시한 오프라인 조사를 합친 결과이다. 성별은 남성 48.3%, 여성 51.7%, 연령은 20대 19.5%, 30대 17.1%, 40대 17.8%, 50대 17.2%, 60대 이상 29.6%로 구성되었다.

〈그림7〉 한중일 3국 협력 현황

(단위: %)



구체적으로, 〈그림6〉과 같이, 한중일 3국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각각 약 91.58%, 87.78%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일본은 71.09%만이 3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에 더하여,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약 17.35%에 달하였다는 점과 한국과 중국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관심없다’라는 응답이 일본에서만 약 11.36%에 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그림7〉의 한중일 3국 협력의 현황에 대해, 중국의 약 64.69%가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약 19.31%, 약 15.77%만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그림8〉 한중일 3국 협력을 주도해야 할 국가

(단위: %)



한편, 〈그림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중일 3국 협력을 주도해야 할 국가에 대한 응답이 흥미롭다. 한중일 3국 모두 3국 협력을 이끌어야 할 국가로 모두 자국을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상대국에 대한 평가 중, 특히 한국을 협력을 주도할 국가로 생각하는 일본과 중국의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으로, 3국 협력을 이끌어야 할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일본 응답자는 전체의 0.3%, 중국의 2.3%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이 한국에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⁹⁾

한편, 한중일 3국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경도와 효용성에 대한 의견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그림9〉과 같이, 한중일 3국 협력 프로그램 인지경도에 대해 중국 응답자의 93.07%, 한국 응답자의 74.07%가 인지하고 있다고 한 반면, 일본 응답자의 경우 절반에 못 미치는 약 49.84%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9) Sakaki and Wacker은 그들의 연구보고서에서, 서울대학교 박철휘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서울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적 경쟁구도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Sakaki, Alexandra and Gudrun Wacker, "China-Japan-South Korea: A Tense Ménage à Trois," p. 5.

〈그림9〉 한중일 3국 협력프로그램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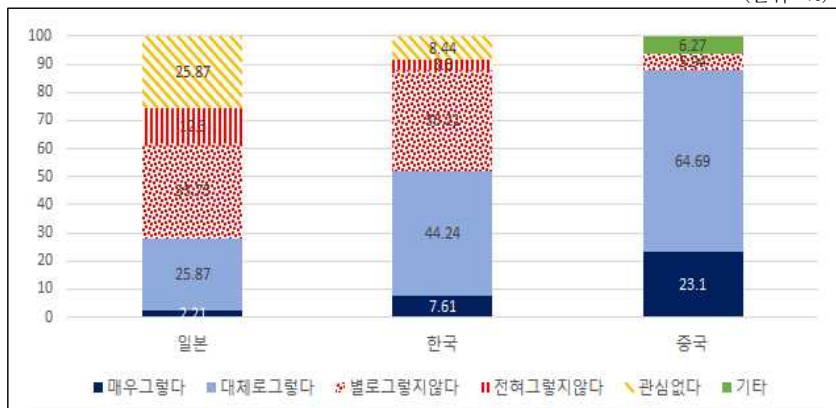
(단위: %)



또한, 〈그림10〉와 같이, 한중일 3국 협력 프로그램이 3국 협력증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국 응답자의 87.79%, 한국 응답자의 51.85%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일본 응답자의 경우, 28.08%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덧붙여, 〈그림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심없다’라는 응답이 일본 응답자에게서만 나온 것과 유사하게, 〈그림10〉에서도 ‘관심없다’는 일본의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25.87%를 차지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10〉 한중일 3국 협력프로그램의 3국 협력증진 기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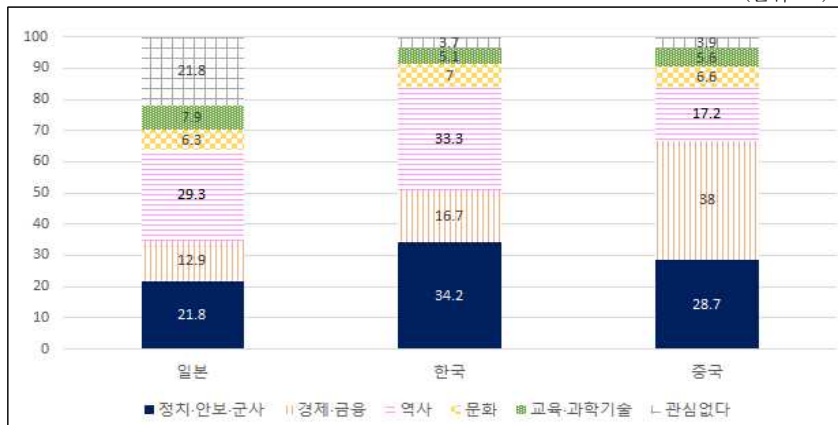
(단위: %)



한편, 한중일 3국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일본과 한국은 정치·안보·군사(일본 21.8%, 한국 34.2%)와 역사(일본 29.3%, 한국 33.3%)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1순위, 2순위로 지목한 것과 달리, 중국은 경제·금융(38%)과 정치·안보·군사(28.7%)에 대해 필요성이 1순위, 2순위로 나타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또한, 한국, 중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관심없다’는 응답이 21.8%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정치·안보·군사 및 역사문제 다음으로 많은 수치를 차지하였다.

〈그림11〉 한중일 3국 협력이 필요한 분야

(단위: %)



요약하면,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 높은 친밀감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리적으로도 멀리 위치한 미국, 러시아, 인도 등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3국 관계에 대해서도 한국,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의 필요성과 현황, 협력프로그램의 인지 정도와 효용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일본의 대(對)아시아 정책과 한중일 3국 관계

III장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해서도 한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중일 3국 협력에 동의하였고, 2018년 현재까지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 본 장에서는 일본의 대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중일 3국의 첫 정상회의는 1999년 11월 ASEAN+3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찬회동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중일 3국이 국제회의에 동시에 참가한 것도 ASEAN+3 메커니즘이 처음이었고, 1999년 당시의 조찬회동도 3국 정상간의 최초의 역사적인 회합이었다.¹⁰⁾ 이와 같은 3국 정상회의는 2001년까지는 조찬을 겸비한 비공식 회의형태로, 2002년부터는 공식회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ASEAN 회의와는 별도로 3국간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회의의 형태변화와 개최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기¹¹⁾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기는 ASEAN+3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중일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된 1999년부터 한중일 3국만의 독자적 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한 2008년까지이다. 두 번째 시기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2008년부터 중단되기 전인 2012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한중일 3국 회의가 시작되고 매년 빠짐없이 회의가 개최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단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이다. 201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정상회의는 7차 2015년 11월 이후, 2018년 5월 개최 등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0) 신봉길, 『한중일 협력의 진화: 3국 협력사무국(TCS) 설립과 협력의 제도화』, 서울: 아연출판부, 2015, p. 52.

11) 신봉길(2015)은 그의 저서에서 한중일 3국협력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① 태동기(1999년 ASEAN+3)계기 첫 3국 정상모임, ② 발전기(2008년 한중일 별도 정상회의 시작), ③ 도약기(2011년 3국 협력사무국 출범), ④ 조정기(2013년, 2014년 정상회담 개최 연기)의 4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1. 제1시기(1999년 11월~2008년 12월) : 오부치(小淵) 총리의 린교(隣交)¹²⁾ 와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제1시기는 ASEAN+3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중일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된 1999년부터 단독회의가 개최된 2008년까지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한중일 정상회의는 1999년 ASEAN+3 회의를 계기로 비공식 조찬회동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대 이후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8년 독자적인 회의를 개최하기 전까지 한 차례, 2005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태동하게 된 시기의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오부치(小淵) 내각의 대아시아관 및 정책과 한중일 정상회의 중단에 원인을 제공하였던 고이즈미(小泉) 내각을 중심으로 대아시아관 및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한일, 중일간 관계가 급진전 된 이유에 대해 일본 국내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1990년대의 일본과 주변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과거사 문제였는데, 그중에서도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내 역사인식을 둘러싼 자민당 내 대립으로 이어졌다.¹³⁾ 한 그룹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통한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아시아 국가의 일부로서 일본을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반성적, 사죄중심형 외교에 기반을 둔 아시아에 대한 접근에 반기를 들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 동승하여 중국과 한국, 북한을 견제하려는 탈아시아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¹⁴⁾ 이러한 논의는 전후 일본의 국가론 논쟁에서 일본의 전전 경험을

12) 『「21世紀日本の構想」懇談会「第1章日本のフロンティアは日本の中にある(総論)」』, www.kantei.go.jp/jp/21century/houkokusyo/1s.html(검색일: 2018.9.13.).

13) 자민당 보수의 보수우파, 보수리버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박철희, “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일본비평』, 10호, 2014, pp. 70~97 참조.

14) 박철희, “일본 자민당 정치세력의 동아시아관-1960년대와 1990년대의 비교.” 남기정 엮음, 『전후 일본, 그리고 낯선 동아시아』, 서울: 박문사, 2011, p. 262.

둘러싼 해석과 일본의 국력상승에 따른 일본의 역할을 둘러싼 의견 차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이 나누어져 있던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한 축은 일본의 국가활동에 있어 군사적인 측면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이고, 다른 한 축은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가 혹은 국제적인 공헌과 협력을 우선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¹⁵⁾ 이와 같은 대립구도에서 오부치 총리는 일본의 역할을 작은 정부와 적극적인 국제공헌으로 보았다.

오부치 총리는 일본의 대외관계에 있어 미일동맹과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 강화를 중시하였고,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통상의 외교노력 이상의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국민적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일본국민이 주변국 민족의 역사, 전통, 언어, 문화를 충분히 이해해야 함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서 양국의 역사와 일본과의 관계사, 현대사 교육, 한국어와 중국어 등의 어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일, 중일의 양국, 혹은 한중일 3국간 투트랙 외교, 지적교류, 문화교류, 지역간 교류, 청소년교류 등 다층적인 대화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외교적 노력을 ‘린교(隣交)’라 한다.¹⁶⁾ 이상의 아시아관을 바탕으로 오부치 내각의 대외정책의 성과는 1998년 한일공동선언, 중일공동선언이 이어졌으며, 1999년 한중일 3국 정상간의 조찬회동이 이루어지는데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한편, 오부치, 모리(森) 총리에 이어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는 동아시아 일본,

15) 박철희는 이러한 대립구도의 축을 중심으로 국가의 장기적 발전노선을 둘러싼 정치세력을 국제협력과 비군사주의를 강조하는 ‘통상국가론자’, 국제협력과 군사주의를 강조하는 ‘보통국가론자’, 민족주의와 군사주의를 강조하는 ‘자주국가론자’, 비군사주의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평화국가론자’로 분류하였다. 박철희, “일본 보수세력의 국가론과 동아시아 인식,” 박태호·박철희 엮음, 『동아시아의 로컬리즘, 내셔널리즘, 리저널리즘: 일본 국가의 성장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진화를 중심으로』, 서울: 인간사랑, 2007, p. 173. 또한, 리처드 사무엘스(Richard Samuels)는 탈냉전기 국제구조변동에 대한 일본의 국가구상 담론을 미일동맹과 자국의 무력사용 정도에 따라 보통국가론자(Normal Nation-alists), 미들파워 국제주의론자(Middle-Power Internationalist), 신자주국가주의론자(Neoautomists), 평화주의론자(Pacifist)들의 주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Samuels, Richard J.,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16) 최은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의 의미와 한일관계-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pp. 7~8.

ASEAN, 중국, 한국 외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한 ‘동아시아공동체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이즈미 내각의 대아시아 정책이 미일관계보다 우선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하는 지역개념을 확대시킨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¹⁷⁾ 즉, 한국과 중국을 협력의 틀 안에서 보되, 3국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협력이 아닌 동아시아 지역의 일부로서 3국 협력을 여긴 것이라 할 수 있다.

2001년 4월 집권한 고이즈미 총리는 3국간 정상회담에 대해 이전 정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으며, 차기 회담부터는 조찬 형식이 아닌 좀 더 공식적인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3년 10월 개최된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협력의 엔진으로서 지역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¹⁸⁾ 그러나 2005년 들어 한중일 3국의 영토문제, 역사문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으로 인해 3국 협력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속하고,¹⁹⁾ 일본 우익들의 역사 교과서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중단되었다.

이처럼 경색되어있던 한중일 3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은 2006년 고이즈미 총리에서 아베(安倍) 총리로 정권이 바뀌면서 부터이다. 새로 취임한 아베 총리는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한중일 정상회의의 복원을 시도하였다.²⁰⁾ 그 결과, 2006년 10월 8일 중일 양자회담(베이징), 10월 9일 한일 양자회담(서울)이 성사되었고, 한중일 3국은 2007년 1월 ASEAN+3 회의를 계기로 하여 정상회담

17) 김기석,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김영작·김기석(편),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조양현,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의 다자주의 전략.” 박철희 엮음,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서울: 동아시아재단, 2014, pp. 227~257.

18) 신봉길, 『한중일 협력의 진화: 3국 협력사무국(TCS) 설립과 협력의 제도화』, pp. 75~76.

19)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정권 출범 이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야스쿠니신사를 매년 참배하였다.

20) 최원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제도화 방안 연구』, IFANS 정책연구과제, 2014-12.

을 재개할 것에 합의하였다.

2. 제2시기(2008년 12월~2012년 5월): 민주당의 아시아중시 정책과 하토야마(鳩山)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제2시기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2008년부터 정상회의가 중단된 2012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주로 전후 일본의 55년 체제를 붕괴시키고,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²¹⁾ 집권기²²⁾에 속한다. 오자와(大沢) 前 대표와 협력하여 정권교체에 성공한 하토야마(鳩山) 총리는 고이즈미 총리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이 아시아를 등한시한 채 미일동맹을 강화하던 것과 달리, 아시아 외교의 복원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구축을 자민당과의 차별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가운데 하토야마 총리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연대 구축을 강조한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를, 오자와는 미중 등거리 외교정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하토야마 내각에서 중국 및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면서 2009년 10월과 2010년 5월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²³⁾하지만 미일동맹 일변도와 다른 노선을 취하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동아시아공동체의 진전 미비 등으로 하토야마 내각의 구상은 오래가지 못하였다.²⁴⁾

하토야마 내각 이후의 간(菅) 내각은 센카쿠 열도 문제로 갈등을 빚는 중국

21) 민주당은 1996년에 결성되어 분산되어 있던 야당들을 흡수 통합하고, 2003년 오자와(大沢)가 이끄는 자유당과의 통합을 계기로 자민당에 대항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되었다. 이후,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정권을 이기고,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압승하면서 여당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반(反) 자민당 노선을 제창함으로써 인기를 끌었던 민주당은 사회복지공약의 낱말로 인한 재정 부담, 중국과의 영토 갈등 심화 등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3년 3개월 만에 끝이 났다. 박철휘 엮음, 『동아시아 세력전야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서울: 동아시아재단,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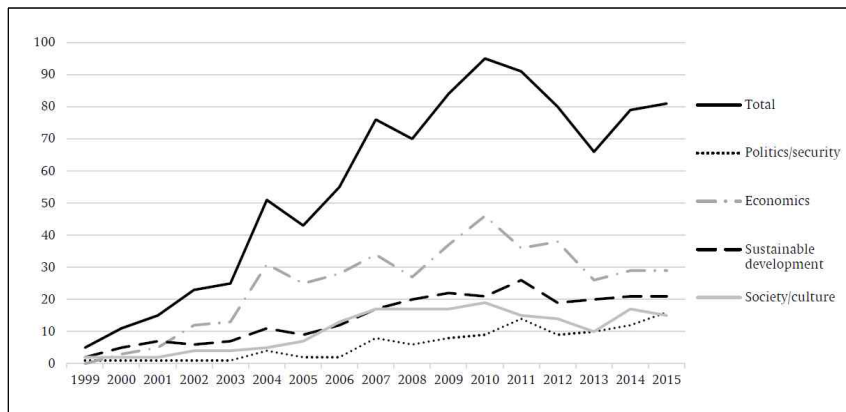
22) 민주당은 3년 3개월(2009.9~2012.12)의 집권기간 동안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2009.9~2010.6), 간 나오토(菅直人 2010.6~2011.8),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2011.8~2012.12) 3명의 총리를 배출하였다.

23) 조양현, “동아시아 세력전야와 일본의 다자주의 전략,” p. 241.

24) 민주당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박철휘 외, 『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참조.

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관계 구축에 적극성을 보였다. 이후, 노다(野田) 내각에서는 미일동맹을 일본외교의 기축으로 하며, 중국과의 대결을 한층 강화하였다. 반면,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하토야마 총리나 간 총리와는 달리 상당한 거리를 두었다.²⁵⁾ 이처럼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아시아에 대한 관점은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집권기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자민당 집권기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아래 <그림12>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한중일 3국간 진행된 회의로 민주당 집권기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상당히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12> 전체 및 주제별 한중일 3국 회의 수(1999-2015)



출처: TCS Annual Report and media reports; Sasaki and Wacker (2017) p.29.

25) 박철희, “동아시아 세력전야와 아베 내각의 대외전략 기초,” pp. 28~31.

3. 제3시기(2012년 5월~2018년 12월 현재): 아베 내각의 대아시아정책

제3시기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12월 현재까지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5차 회담 이후부터 2015년 11월 6차 회담이 재개될 때까지 약 3년 6개월간 중단되었고, 2015년 6차 회담이 개최된 이후, 2018년 5월 7차 회담이 개최될 때까지 다시 2년 6개월간 중단되었다. 2015년 6차 회담 이후 2018년 7차 회담이 개최되기까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국내정치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일본 아베 내각 집권기라는 점에서 아베 내각의 대아시아관 및 정책을 살펴볼 수 없다.

앞서 민주당 정부의 실패는 아베 내각에게 더욱 견고한 미일동맹 중시와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아시아정책 수립이라는 교훈을 주었다. 아베 총리는 민주당과 외교안보 면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며, 수정주의적 역사관과 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민주당이 추구한 외교 의제가 자학사관, 사죄외교, 반성외교에 기반한 것으로 보고, 종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부정, 역사교과서 문제 등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기반한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아베 총리는 영토문제와 관련한 주권적 시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며,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해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었다.²⁶⁾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대외전략으로서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외교’, 지구본을 보듯 세계 전체를 보고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인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보편적 외교’, 영토·영해·영공 및 주권적 영역을 강력하게 수호하는 ‘주장하는 외교’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민주당 정권 말기 점화된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문제, 한국과의 독도문제 등이 있었다. 특히,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위기감에 따른 적극적인

26) 박철희, 위의 논문, p. 32.

대응과 강한 일본으로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일본의 견제는 중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중국의 ‘진주목걸이 구상’에 대항하는 ‘안보다이아몬드 구상’ 등 경제·안보 등의 분야에서 나타난다.²⁷⁾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일본에게 중국은 경제적인 교역이 늘어나면서 협력해야 할 국가임과 동시에, 견제해야 할 대상이고, 영토문제를 둘러싼 안보적인 측면에서 위협감을 느끼는 동시에 대응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한편, 일본에게 한국은 북한문제를 둘러싼 안보측면에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야 할 대상임과 동시에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해야 할 국가이다. 하지만 한일간의 과거사 갈등은 양국관계의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중일 3국 회의는 2015년 11월까지 개최되지 않았고, 특히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적 태도와 국수주의적 경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와 중일관계는 계속 악화되었다. 더욱이 2013년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단행과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고노담화(河野談話), 무라야마담화(村山談話) 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규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아베 정권에서 개최된 2015년 제6차, 2018년 제7차 정상회담은 3국 협력의 연속성과 지역협력의 모멘텀을 복원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3국 정상회의 개최 여부가 양자 관계의 호불호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²⁸⁾ 더욱이 일본 아베 정권의 대외전략에서 한국과 한중일 3국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아베 정권에서 현재 주력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과도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

27) 일본의 정체성과 경제안보적 대외정책에 대한 연구는 최은미, “일본 TPP 추진의 정체경제: 일본의 국가 정체성과 지역구상의 관점에서.” 『동아연구』 제37권 제1호, 2018, pp. 193~231 참조.

28) 조양현,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평가 및 함의』,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18.

4. 요약 및 분석: 일본과 아시아

탈냉전기 이후 일본의 외교전략은 아시아·태평양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아시아’에 무게를 두었다. 냉전의 붕괴로 인한 아시아내 갈등 구조의 약화, 아시아의 경제성장, 미일경제마찰에 의한 반미의식의 성장은 일본의 눈을 아시아로 돌리게 만들었다. 후나바시 요이치는 이를 ‘아시아의 재발견’이라고 불렀다.²⁹⁾ 당시 나타난 APEC 및 ARF 설립에 있어서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를 잘 보여준다.³⁰⁾ 1990년대 일본정부의 역사인식과 아시아 중시 정책은 이러한 배경 하에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1997년 경제위기는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 외교를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는 외적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은 지역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³¹⁾ 1999년 역사적인 한중일 3국 정상간의 조찬회동의 주요의제가 경제협력이었다는 점은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아래 <표1>은 1999년 ASEAN+3 회의계기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개요와 주요의제를 정리한 것이며, <표2>는 2008년부터 독자적으로 마련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정리한 것이다.

<표1> 한·중·일 정상회의(ASEAN+3 계기)* 개최 현황

차수	일시	장소	참석자	의제
1	1999.11.28	필리핀 마닐라	김대중 오부치 주몽지(의장)	• 3국의 경제개혁 정책 • WTO 뉴라운드에서의 공동 대응방안 모색 • 동아시아 경제협력 • ASEAN+3 회의시 논의할 경제협력 문제
2	2000.11.24	싱가폴	김대중(의장) 모리 주몽지	• 3국간 문화·인적교류 활50.성화 • 동아시아 비전그룹 활동 지원 • IT 및 환경 분야 협력 • ASEAN+3내의 한·중·일 협력

29) 船橋洋一, 『アジア太平洋フュージョン』, 東京: 中央公論社, 1995.

30) 최희식, “현대 일본의 아시아 외교 전략: 내재적 접근에서 외재적 접근으로,” 『國際政治論叢』, 제49집 2호, 2009, p. 38.

31) 신봉길, 『한중일 협력의 진화: 3국 협력사무국(TCS) 설립과 협력의 제도화』, p. 50.

차수	일시	장소	참석자	의제
3	2001.11.05	브루나이	김대중 고이즈미(의장) 주룽지	• 3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신규사업 제안 • 3국 정보통신분야 협력 • 테러리즘 및 환경협력 등 초국가적 문제 • 02년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 사업 • 3국 협력 추진방향
4	2002.11.04	캄보디아 프놈펜	김석수(총리) 고이즈미 주룽지(의장)	• 3국간 협력현황 검토 및 전망 • ASEAN과의 협력 방안 • 3국의 국내경제 현황 • 여타문제(북핵문제 등)
5	2003.10.07	인도네시아 발리	노무현(의장) 고이즈미 원자바오	• 3국 정상 공동선언 채택 • 3국간 번영을 위한 협력 (경제분야) • 3국간 평화를 위한 협력 (안보분야) • ASEAN 협력 및 여타사항
6	2004.11.29	라오스 비엔티엔	노무현 고이즈미(의장) 원자바오	• '실적보고서' 및 '행동전략' 평가 • 동아시아지역 협력(EAS, EAC) • 역내 및 세계문제(북한핵, 유엔개혁문제)
7	2007.01.14.	필리핀 세부	노무현 아베 원자바오(의장)	• 비엔티엔(04년) 정상회담 이후 2년 만에 개최 - 공동언론발표문 형식 채택 (최초) - 3국 협력 실적 평가, 향후 추진방향 협의 (황사문제 공동 대응, '에너지 전략 대화' 구축 등 우리 관심 사항 거론) • 동아시아 협력 추진방안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 유엔 개혁
8	2007.11.20	싱가폴	노무현(의장) 후쿠다 원자바오	• 3국 협력 현황 평가, 향후 추진방향 협의 • 신규 추진사업 채택 협의 • 동아시아 협력 추진방안 • 한반도 정세 호전 평가 및 동북아 평화·안정 확보 방안 논의
9	2009.04.11	태국 파타야	이명박 아소 원자바오(의장)	• 동북아 정세 및 3국 협력관련 의견 교환 • 태국 파타야 비상사태와 관련 공동대응 방안 논의 • 여타 지역 및 국제 문제 관련 공통 관심사
10	2010.10.29	베트남 하노이	이명박(의장) 칸 원자바오	• 3국 협력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11	2011.11.19	인도네시아 발리	이명박 노다(의장) 원자바오 TCS사무총장 (오퍼버)	• 3국 협력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ASEAN+3 정상회의 중 3국 정상이 별도로 만나는 회의

출처: 한일중 3국협력 사무국 홈페이지, "한일중 3국협력 협의체" 참조 정리 http://kr.tcs-asia.org/ko/data/mechanism_detail.php?parent=220

〈표2〉 한·중·일 정상회의 현황

차수	일시	장소	참석자	의제
1	2008. 12.13	일본 후쿠오카	이명박 아소(의장) 원자바오	•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국제 금융 및 경제문제 공동 대처 •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2	2009. 10.10	중국 베이징	이명박 하토야마 원자바오(의장국)	•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한국, TCS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구상안 제시 •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3	2010. 05.30	한국 제주	이명박(의장국) 하토야마 원자바오	• 3국 협력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 지역 및 국제문제 -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핵안보, 국제 경제, 금융위기, 동아시아 지역협력, 군축 및 비확산, UN개혁 등
4	2011. 05.29	일본 도쿄	이명박 칸(의장국) 원자바오	• 3국 협력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 지역 및 국제문제
5	2012. 05.13	중국 베이징	이명박 노다 원자바오(의장국)	• 3국협력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 지역 및 국제문제
6	2015. 11.01	한국 서울	박근혜(의장국) 아베 리커창 TCS 사무총장	• 3국 협력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 지역 및 국제문제 -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 경제, 기타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보건 안보 등)
7	2018. 05.09	일본 도쿄	문재인 아베(의장국) 리커창 TCS 사무총장	• 3국 협력의 평가 및 미래발전 방향 • 지역 및 국제문제

출처: 한일중 3국협력 사무국 홈페이지, "한일중 협의체: 정상회의" 참조 정리
http://kr.tcs-asia.org/?doc_id=by_level07&wr_3=summits (검색일: 2018.11.10.)

〈표1〉과 〈표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3국 협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1999년 이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 3국 협력은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09년 이후의 민주당 정권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 아시아 중시 정책을 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2012년 아베 정권이 들어서부터 현재까지 3국은 협력의 끈을 이

어가며 상호 국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상회의 정례화 및 3국 협력의 제도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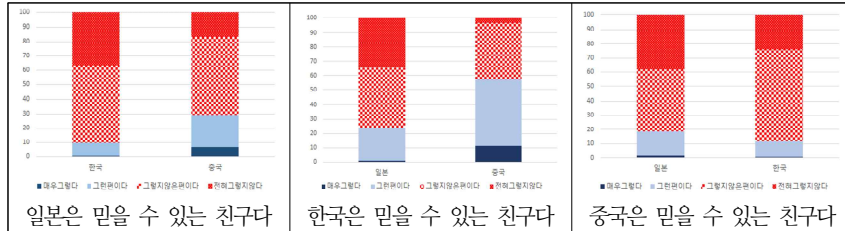
한중일 3국은 유교라는 동일한 가치관과 규범을 공유하고 있고, 경제협력 등을 통한 실질적 이익 증대라는 측면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협력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3국의 경제성장력과 잠재력이 뛰어나며,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한중일 3국이 처한 산업구조, 도시화, 인구 변화 등의 문제 등은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³²⁾ 그러한 의미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은 더욱 실질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한중일 3국 간의 이해와 친근감의 정도는 기대만큼 높지 않다. 특히, 일본의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미국, 유럽, 인도보다도 높지 않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그림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의 신뢰도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제외하고 모두 낮게 나타난다. 특히, 일본의 한국 및 중국에 대한 신뢰도와 일본에 대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신뢰도는 상호간 모두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 한중일 3자간의 신뢰의 폭이 깊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정영태, 『동아시아 3국의 사회변동과 갈등관리: 한국, 일본, 중국』, 서울: 소명출판, 2015.

〈그림13〉 한중일 3국간 신뢰도 정도

(단위: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친밀감과 신뢰도가 낮은 불편한 관계의 3국이 ‘협력의 틀’을 만들어 공존하려는 이유에 대해 3국 협력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일본의 인식과 대외전략을 기반으로 이를 설명해보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촉발시킨 외부적 요인(경제위기 등)과 국가간의 필요 외 협력을 증진 및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국의 대외정책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에서 상대국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중시 정책을 실행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의 3국 협력의 양적·질적 심화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약화된 2012년 이후 아베 정권에서의 3국 협력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이를 잘 반영한다. 더욱이 3국 간에 내재해 있는 한일·중일의 역사갈등은 3국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중일 3국 관계는 앞서 언급하였듯,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지닌 채, ‘3국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최소한의 우호 관계’를 형성하는 ‘삼자동거의 긴장관계(a tense ménage à trois)’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일 3국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 3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은 추후 과제로 남기면서 본 연구가 한중일 3국 협력의 진전을 위한 연구 축적물의 일환이자, 추후 이루어질 많은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기미야 타다시, “중국을 둘러싼 한일관계: 한국, 한반도에서 본 일본의 대중 인식, 정책.” 『日本研究論叢』 Vol. 47, 2018.
- 김기석,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김영작·김기석 편,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 박철희, “일본 보수세력의 국가론과 동아시아 인식.” 박태호·박철희 엮음, 『동아시아의 로칼리즘, 내셔널리즘, 리저널리즘: 일본 국가의 성장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진화를 중심으로』, 서울: 인간사랑, 2007.
- _____, “일본 자민당 정치세력의 동아시아관-1960년대와 1990년대의 비교.” 남기정 엮음, 『전후 일본, 그리고 낯선 동아시아』, 서울: 박문사, 2011.
- _____, “동아시아 세력전선과 아베 내각의 대외전략 기초.” 박철희 엮음, 『동아시아 세력전선과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서울: 동아시아재단, 2014.
- _____, “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일본비평』, 10호, 2014.
- 박철희 외, 『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 신봉길, 『한중일 협력의 진화: 3국 협력사무국(TCS) 설립과 협력의 제도화』, 서울: 아연출판부, 2015.
- 신옥희,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 외교부, 『2016 한일-중 협력 개황』, 2016.
- 이원덕, “한일 역사마찰을 넘어 한중일 협력체제로.”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66, 2016.
- 정영태, 『동아시아 3국의 사회변동과 갈등관리: 한국, 일본, 중국』, 서울: 소명출판, 2015.
- 조양현, “동아시아 세력전선과 일본의 다자주의 전략.” 박철희 엮음, 『동아시아 세력전선과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서울: 동아시아재단, 2014.
- _____,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평가 및 함의』,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18.
- 최원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제도화 방안 연구』, IFANS 정책연구과제, 2014-12.
- 최은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의 의의와 한일관계-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 _____, “일본 TPP 추진의 정경경제: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지역구상의 관점에서.” 『동아연구』, 제37권 제1호, 2018.
- 최희식, “현대 일본의 아시아 외교 전략: 내재적 접근에서 외재적 접근으로.” 『國際政治論叢』, 제49집 2호, 2009.
- Caplow, Theodore, “A Theory of Coalitions in the Tria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1, No. 4, 1956.
- Dittmer, Lowell,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 4, 1981.

Sakaki, Alexandra and Wacker, Gudrun, "China-Japan-South Korea: A Tense Ménage à Trois." SWP Research Paper, 2017.

Samuels, Richard J.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船橋洋一, 『アジア太平洋フュージョン』, 東京: 中央公論社, 1995.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홈페이지(www.tcs-asia.org).

일본 내각부(www.cao.go.jp).

일본 수상관저(www.kantei.go.jp).

Abstract

Japan's Diplomatic Strategy towards Asia and Korea-Japan-China Trilateral Relations - Focusing on Japanese Perception on Korea and China, and Foreign Policy towards Asia -

Eunmi Choi(Research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It is hard to prove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albeit its necessity, appropriateness, and expectation. In addition, the issues of past history such as the bilateral history and territorial conflicts between the three nations have caused difficulties in the progress of trilateral cooperation. Nevertheless, three nations have reached agreements and continued its efforts towards cooper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asons why the three uncomfortable countries are trying to cooperate from the Japanese critical perspectives towards trilateral cooperation based on Japan's perception on Korea and China, and international strategy towards Asia. As a result, it is observed that the importance of each country's foreign policy to the other countries plays as a significant factor in promoting and advancing the trilateral cooperation. Meanwhile, the inherent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Korea-Japan and China-Japan are a factor to impede the cooperation between three countries. In this sense, Korea-China-Japan relations with 'internal instability' have formed 'a tense ménage à trois' which forms a 'minimum amount of amicable rel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rilateral cooperation'.

Keywords: Korea-Japan-China, Trilateral Relations, Trilateral Cooperation, Japanese Foreign Policy, Tense Ménage à trois

투고일: 2018년 11월 21일, 심사일: 2018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8일
--